

#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 < 순경 공채 >

- [필수] 해양경찰학개론(01), 형사법(12)
- [선택] 해사법규(04), 헌법(05)



###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분야, 계급,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 해 양 경 찰 청

## 해양경찰학개론

1. 다음 중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국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다.
- ②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실정법상 해양경찰청에 분배된 사무를 말한다.
- ③ 해양경찰청이 하는 사인과의 계약이나 대국민 홍보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개념에 포함된다.
- ④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 단속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 해당된다.

2. 다음 <보기>의 해양경찰 역사를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 해양경찰대설치법 제정
- ㉡ 해양경찰대 청사 인천 이전
- ㉢ 수난구호법 제정
- ㉣ 상공부 해무청 소속으로 변경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3.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②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되, 위원회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③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퇴직자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4.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시보 임용과 승진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② 정규 임용의결은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지 않으며,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 ④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계산할 때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은 이에 산입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해양경찰 작용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산금
- ② 대인적 즉시 강제
- ③ 대집행
- ④ 경찰 허가

6. 다음 중 예산집행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배정요구 → 배정계획수립 → 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행위
- ② 배정요구 → 배정계획수립 → 배정  
→ 지출행위 → 지출원인행위
- ③ 배정계획수립 → 배정요구 → 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행위
- ④ 배정계획수립 → 배정요구 → 배정  
→ 지출행위 → 지출원인행위

7. 다음 경찰 통제의 유형 중에서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 ① 국회의 국정감사권
- ② 국회의 예산심의권
- ③ 행정소송
-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

8.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5,000톤급 경비함 명칭은 역사적 지명·인물로, 3,000톤급 경비함 명칭은 '태평양 ○호'로 명명한다.
- ② 신조 함정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에 관한 편제 명령권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다.
- ③ 소속기관장은 당직 함정 및 예비 당직 함정을 각 1척씩 날마다 지정하여 운용하되, 당직 함정이 긴급출동한 때에는 예비 당직 함정이 당직 함정 임무를 수행한다.
- ④ 특수함정별 운용계획은 잠수지원함의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 소방정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이, 중형 특수기동정의 경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이 각각 수립한다.

9. 다음 <보기> 중 불법 외국 선박에 대한 단속 근거로 보기 어려운 법령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 「해양경비법」
- ㉢ 「해양과학조사법」
- ㉣ 「UN해양법협약」
- ㉤ 「어선법」
- ㉥ 「해양환경관리법」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해양과학조사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1.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은 자국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연안국은 해양과학 조사와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 ③ 연안국은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 ④ 연안국은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12. 다음 중 「국제 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지침서(IAMSAR)」상 사용되는 용어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조정관	OSC	On-scene Co-ordinator
②	항공수색 구조조정관	ACO	Aircraft Co-ordinator
③	구조조정본부	RCC	Rescue Co-ordination Center
④	수색구조대	SRR	Search and Rescue Region

1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치목적은 해상 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야간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항해등      ㉡ 위성항법장치      ㉢ 통신기기
- ㉣ 호루라기      ㉤ 레이더 반사기      ㉥ 구명튜브
- ㉦ 소화기      ㉧ 자기점화등      ㉨ 나침반
- ㉩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 ① 7개      ② 8개      ③ 9개      ④ 10개

15. 다음 <보기>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의 조업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 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범죄수사에서 형식적 의미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추구한다.
- ② 절차적인 측면에서 수사를 말한다.
- ③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결정한다.
- ④ 주로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한다.

17. 다음 중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 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타진의 단계이다.
- ② 방첩의 수단 중 적극적 수단으로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 ③ 헌법 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은 방첩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간첩, 태업, 전복 등의 국가위해행위로부터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18.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MARPOL                      ② SOLAS
- ③ SAR                          ④ COLREG

19. 다음 중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북태평양 해양 경찰회의(NPCGF: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가입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싱가포르      ② 캐나다      ③ 일본      ④ 미국

20.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③ 2킬로미터 이상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유선장에는 노도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추어야 한다.

## 형 사 법

### 1. 다음 중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약 밀수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으나 정작 마약 밀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② 태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 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유럽 국가에 이송하기로 모의하였으나 이를 포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③ 일본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일본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④ 형사사건으로 필리핀 법원에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판결 받을 때까지의 미결 구금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형의 산입의 대상이 아니다.

### 2.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살인죄에 있어서 범인이 칼로 찌른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가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3.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승낙의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③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철회한 경우 이전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4.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인이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자진해서 응해주겠다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하자 강간을 포기한 경우, Frank공식에 따르면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범인이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그의 부모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돌려보냈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물요구죄의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성립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밀수를 하려던 자가 범행 당일에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범자 중 1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의해 실제로 결과가 방지된 경우, 중지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는 불능미수가 된다.

5.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② 공범자가 포괄일죄의 범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이때 공범자는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③ 공문서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에 행하여진 다른 공모자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때 이탈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공동피고인 중에서 1인이 증거동의를 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그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 ④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7.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 ③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④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8.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부동산 소유자 甲이 A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회사직원인 甲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 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④ 甲이 알 수 없는 경위로 A의 특정 거래소가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9.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 ㉡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그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방화를 하였는데,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 ③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 ④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1.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득액의 산정에서 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으나 경합범은 그 액수를 합산한다.
- ② 회사사장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④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중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12.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받아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금액, 수취인 변경을 함부로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청구 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변경신청서에 위 약속어음을 복사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로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에 甲이 乙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甲은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13.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주류회사 이사인 甲은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분쟁 중에 A의 착오로 위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4,7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A로부터 해당 금액이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甲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설령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상계권 행사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더라도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방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은행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범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상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 ②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에 따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 상해죄는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
- ④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6. 다음 <보기>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7.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②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③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허용된다.
- ③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 제기가 무효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의 신의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19.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영미법상 판례에 의해 확립된 증거법칙으로서 일반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20.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그 차용한 원금이 뇌물이 된다.
- ③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무원은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해사법규

1. 다음 중 각 법령에서 정의하는 소형선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법」상 총톤수 19톤인 기범선 중 주로 돛을 사용하는 선박은 소형선박이다.
- ② 「선박법」상 총톤수 90톤인 부선은 소형선박이다.
- ③ 「선박안전법」상 선박길이 10미터인 기선은 소형선박이다.
- ④ 「선박직원법」상 총톤수 25톤인 기범선 중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은 소형선박이다.

2.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선박에 승선하여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비상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 ②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연안 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일반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탑승정원이 연안체험 활동 참가자 인원의 110퍼센트 이상인 비상 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3. 다음 <보기>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
- ㉢ 도로, 교량 등 임항교통시설
- ㉣ 방파제, 방조제 등 외곽시설
- ㉤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 낚시터, 유람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야간 수상레저활동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해수면에서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자는 간이식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② 누구든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해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해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5. 다음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중레저활동’에는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활동이 포함된다.
- ② ‘수중레저기구’에는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포함된다.
- ③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오리발, 수중칼을 포함한다.
- ④ ‘수중레저사업’에는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하여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6.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는 방제조치의무를 부담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한다.

7.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정치망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설정한 보호구역에서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 ② 불빛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 ③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어업권 행사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행위
- ④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8. 다음 <보기>와 관련하여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보기 >

해경호(연안자망, 총톤수 4.99톤, 길이 5미터, 강선)

- ① 조업의 목적이 있는 동력어선은 선적증서를 발급받고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이 선박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해당 선박은 만재할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서장은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명할 수 있다.
- ②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 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10. 다음 <보기>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보기 >

- ㉠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보조항로의 운항에 따른 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 ㉢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선령 20년 이하인 일반여객선을 차도선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국고지원대상 선박이 된다.
-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등록할 수 없다.
-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마리나업’에는 마리나선박대여업, 마리나선박정비업이 포함된다.
- ④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서 카약이 포함된다.

12.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선박의 선박관리인이 승선한 경우 임시승선자이다.
- ②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여객이 아니다.
- ③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이 승선한 경우 임시승선자이다.
- ④ 입항을 위해 승선한 도선사는 임시승선자가 아니다.

13.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특정해역에서 선단의 편성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대피하는 어선의 이탈로 선단에 1척의 어선만 남는 경우, 그 남은 1척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 ㉡ 어획물운반선은 선단을 편성하지 않고 출항할 수 있다.
- ㉢ 만선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탈하려는 어선의 선장은 안전본부에 통보 후 선단에서 이탈할 수 있다.
- ㉣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4. 다음 <보기>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위험물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운송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은 제외)을 선박 내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다음 <보기>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재결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 심판원은 해기사나 도선사 이외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 심판원이 할 수 있는 징계는 면허의 취소·업무정지·견책이며, 업무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 ㉣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견책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누구든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만 해당) 시기는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이다.
- ㉣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과적 대처를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보기>의 내용에서 필요한 숫자의 총합은? (다른 예외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 보기 > —

- ㉠ 승객 정원이 12명인 유선이 50척 있는 경우 필요한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유선의 선원 중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인원은 없다.)
- ㉡ 승객 정원이 200명인 도선의 경우 필요한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도선의 선원 중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인원은 없다.)
- ㉢ 유선장에 2해리 미만으로 운항하는 3.98톤의 유선이 40척인 경우 필요한 최소 비상구조선의 수

① 5                      ② 6                      ③ 7                      ④ 8

18.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려는 총톤수 18톤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내수면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③ 평수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추진기관의 제거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9.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장의 직무상 의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장이 타 인명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 폐기하였다.
- ② 선장이 총톤수 1,000톤인 화물선에서 해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되어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 ③ 선장이 다른 선박의 조난신호를 듣고 인명 구조 조치를 취하였다.
- ④ 선장이 항해 준비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출항하였다.

20.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의 선박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업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선박의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경비함정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선박교통관제 통신 녹음에 관한 정보의 보존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채널번호 70번은 조난·안전 및 호출을 위한 디지털선택호출용으로 사용한다.

## 헌 법

### 1. 다음 대한민국의 영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 ② 헌법상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과대학이 곧 의료면허 취득요건상 국내대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밖에 있는 북한지역에 미치지 않는다.

### 2. 다음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 ②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3. 다음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 ②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 또한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적인 교육영역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 ③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④ 대학 부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유해환경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평온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4. 다음 <보기> 중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건강보험수급권
  - ㉡ 개인택시면허
  - ㉢ 의료급여수급권
  - ㉣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
  - ㉤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 ㉥ 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다음 <보기> 중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특정 신문사업자를 정부가 기금지원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만 기금을 지원하는 차별적 규제를 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
- ㉡ 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정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개인에게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 ③ 현행 헌법규정에 의하면 청원은 문서 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 ④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이나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 ②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 ③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최대한 표출하도록 해야 할 시·도지사 선거에서 확정장치를 사용하는 선거 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가 「공직선거법」상 확정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 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8. 다음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언어와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글자는 정신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 ②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 되도록 한 법률조항은 보건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된다.
- ④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9. 다음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유도 필요성에 차이가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0. 다음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구 「변호사법」 조항 중 ‘법률사건’과 ‘알선’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란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公安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중 ‘부정한 방법’의 개념은 모호하여 법률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④ ‘여러 사람의 눈에 띄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11. 다음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의한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④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12. 다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②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③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 ④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13. 다음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訴)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특허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모든 구체절차나 법적 분쟁에서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회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다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구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④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5. 다음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 ② 집회의 자유는 다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지만,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 ④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상업적 광고 표현 또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16. 다음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개법인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주세법」 조항은 면허가 있는 자들끼리의 동업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 면허업자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자는 동일하거나 동급, 동질의 유사 다른 직업군에서 수령하는 보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7. 다음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현행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해고된 자는 설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시적인 입장이다.
- ④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8. 다음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헌법상 근거가 존재한다.
- ③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그 다른 수단이 효과 측면에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9. 다음 <보기> 중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헌법 규정상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고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부분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을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

20. 다음 국민주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므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한다.
- ②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③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 ④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